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목 차>

1. 손해보험사의 선임계리사 요건 강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권기순
	담당부서 (과)	보험과		직급	사무관
	국장	최훈		연락처	02-2100-2963
	과장	하주식		이메일	kisoon.kwon @korea.kr

정책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손해보험사의 선임계리사 요건 강화		
	2.규제조문	보험업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		
	3.위임법령	보험업법 제184조제5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보험회사는 각 회사별로 회사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를 검증하는 ‘선임계리사’를 두고 있는데,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종목·특성 따라 계리업무의 성격이 상이하여 별도의 요건 신설 필요		
	7.규제내용	손해보험회사가 선임한 선임계리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보험계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선임계리사가 될 수 있도록 함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보험회사, 보험회사의 임직원 등		
	9.규제목표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자동차보험·장기보험을 모두 운영할 수 있으므로 상품별 특성을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 선임계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손해보험 상품·계리업무의 검증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이해관계인이 제도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포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연도부터 시행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5조(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 ① 법 제184조제5항에 따라 선임계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2. (생략) <u><신설></u> 3. (생략) ② (생략)	제95조(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 ① ----- ----- -----. 1.·2. (현행과 같음) 3. <u>손해보험회사가 선임한 선임계리사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보험계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u>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국내 손보사는 보험위험평가 및 보험요율 산출을 위한 전문인력(보험계리사) 부족 등 손해보험 부분의 역량 강화노력에 소홀하다는 지적
- 손보사는 선임계리사*가 일반손해보험 실무경험이 없어도 손해보험, 장기보험, 자동차보험의 모든 보험계리업무를 검증·확인 가능

*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의 내용 및 배당금 계산 등의 정당성 여부 등 보험계리업무를 검증·확인하는 선임계리사를 의무적으로 임명해야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현행유지안 : 일반적인 기준 적용 >

- 손보사에서 일반손해보험 상품개발 전문인력 비중은 장기보험대비 24.7% 수준*으로, 보험사의 전문인력이 장기보험으로 집중

* 손해보험사의 부문별 보험계리사 수 : 장기보험 109명, 일반보험 27명
(삼성, KB, 메리츠, 롯데, MG, 흥국, DB, AIG, 더케이 등 9개 보험사 합계)

- 손해보험 계리업무 종사경력이 없어도 선임계리사를 담당할 수 있어 손해보험사가 손해보험 전문가 육성에 소홀한 측면

< 비규제대안 : 자율적 시행 유도 >

- 보험관련 법규에서 손해보험사의 선임계리사 요건에 일반손해보험 실무경력을 강제하지 않고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
- 손해보험사의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매출 및 자원 집중으로 인해 장기손해보험 경력*을 가진 자를 선임계리사로 운영할 소지

* '17년 손보사 매출(비중) : 장기손해보험 61.2%, 자동차보험 19.6%, 손해보험 19.2%

<선택근거>

-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의 내용 및 배당금 계산 등의 정당성 여부 등 보험계리업무를 검증·확인하는 선임계리사를 의무적으로 임명해야 함
 - 손해보험 경력이 없는 자가 선임계리사 검증·확인업무를 수행할 경우 손해보험의 효율 및 기초서류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소지
 - 손해보험사의 보험위험평가 및 보험요율 산출 역량을 강화하고 손해보험사가 영위하는 모든 보험종목의 보험계리업무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손해보험사 선임계리사의 요건에 손해보험의 최소 실무경력을 의무화할 필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보험업계	'18.상반기부터 금융당국, 보험업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마련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완료	이견없음

3. 규제목표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보험계리업무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손해보험사의 선임계리사가 되도록 하여 일반, 장기 및 자동차 보험 등 손해보험사 모든 보험계리업무의 검증·확인기능 강화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손해보험 상품별 특성을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 손보사의 선임계리사가 될 경우 선임계리사의 선임요건 취지인 계리업무 검증기능 강화 및 소비자 보호 등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그 편익이 우월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외의 경우 손해보험사가 장기손해보험을 영위하지 아니하므로
해외사례는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보험산업 고유의 특성에 따라 도입이 필요한 규제로서 다른 금융업법
등에서는 해당사항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손해보험사의 선임계리사 선임요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보험계리업무 실무경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규제 준수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해관계인이 제도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포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연도부터 시행

○ 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없음

2. 규제 집행가능성

○ 행정·재정적 집행가능성

손해보험사 선임계리사 선임시 금융위원회가 공시하는 손해보험계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를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별도의 인력 및 조직이 소요되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18.상반기부터 해외사례 등 자료수집 및 폭 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금융당국, 보험업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마련된 보험업감독규정 정비방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완료

2. 향후 평가계획

-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는 선임계리사 선임시 금융위원회 (향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게 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개정안 시행 후 선임계리사 선임 보고시 요건 충족여부를 평가하고 관리할 계획

3. 종합결론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보험계리업무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손해보험사의 선임계리사가 되도록 하여 일반, 장기 및 자동차 보험 등 손해보험사 모든 보험계리업무의 검증·확인기능 강화